



사립학교법 개정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정인학 | 「서울신문」 교육 대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국민 분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의 사학법 개정안 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순 건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우격다짐으로 치닫고 있다. 저마다 '참 교육'을 내세우지만 교육자라면 끝내 해선 안 될 극단의 언행이 꼬리를 물고 있다.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의 버팀목이 무너져 내리는 현장일 게다.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채 정치판의 부속품으로 편입되어 이전투구마저 서슴지 않는 교육계의 모습이 끝내 안쓰럽다.

작금의 사학법 논란이 불거진 것은 2000년 9월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38개의 단체가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며 시작됐다. 그러나 정치권의 호응을 유발하지 못해 논의의 명맥만 유지하다가 지난 4월 총선과 함께 흐름이 바꿨다. 폭염이 유난했던 7월, 집권 열린우리당은 17대 원구성이 끝나기 무섭게 사학법을 개혁대상으로 지목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10월 14일 정부와 협의를 끝내고 의원 총회를 거쳐 20일엔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했다.

내용을 간추리면 각급 사학에서는 교사회, 교수회를 필수 기구로 운영해야 하고, 대학에선 대학평의회 초·중등학교에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사실상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재단의 이사회 3분의 1은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용토록 했다. 비리 이사의 복귀 유예 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을 필수조건으로 했다. 언뜻 보면 사학법 개정 자체를 반대해온 사학 재단연합회측 주장과 혁신적인 개정을 요구해온 운동본부측 주장의 장점만은 접목시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학재단측은 문제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극약 대응을 공언하고 있고, 전교조 등은 그들대로 개정안 내용이 당초 구상에서 후퇴했다며 전국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입장을 달리했던 양측 모두 그것도 사생결단으로 반대하는 것을 보면 정부·여당의 개정안이 '엥터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사학의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이

없고, 철학이 없으니 원칙이 없었다. 원칙과 철학이 없는 혼란은 말 그대로 뒤죽박죽이 된다는 상식도 몰랐던 것 같다.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나머지 빨강과 파랑에 녹색을 합하면 흰색이 되지만, 노랑을 보태면 검정이 된다는 이치를 모르면서 덩달아 절충을 흉내 냈던 것이다.

사학법 논란은 교육을 빙자해 사리를 챙기려는 일부 사학의 반사회적인 비리에서 비롯됐다. 교직원 임명 과정에서 자행한 추한 부정 부패는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학교 운영자금을 전용하거나 심지어 횡령하는 파렴치를 저질렀다. 사학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제는 사학 비리를 보는 시각이 갈라지고 자연스레 해법이 차이를 보이는 데 있다.

사학법 개정을 주장해온 운동본부측은 사학의 비리가 사학 특유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재단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 혹은 특수 관계인이 이사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단의 틀을 바꿔 원칙적으로 비리의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사학 비리의 온상인 재단 이사회에 교직원 대표 등을 3분의 1 이상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족벌적 운영을 감시케 함으로써 비리의 유혹을 본원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사학재단측은 문제가 되는 비리는 그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사람 사는 세상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파렴치 행태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사학을 운영자 중에도 지탄 받을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 비리 역시 단순한 형사 사건으로 보아 하나하나 엄벌하면 될 일이라고 한다. 다른 비리는 개별적으로 경중을 가려 처벌하면서 유독 사학 비리만은 사학 모두의 연대책임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인다. 재단 이사회의 3분의 1을 외부인사에 개방해야 한다는 대목에선 언어도단이라고 못을 박는다. 사학에 공여한 재산도 명백한 개인의 재산으로 재산권의 제약은 반헌법적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운동본부측의 반론도 만만하지 않다. 교육은 다른 분야와 달리 다음 세대의 사회화 과정으로 그 공공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교육적인 비리가 교육의 현장에서는 티끌만큼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사학의 비리구조를 해체하는 수단으로 사학법 개정은 불가피하고 같은 맥락에서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 재단의 학교 전입금이 필요 재원의 2%로 나머지 98%를 학생 수업료와 국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대꾸한다.

확실히 사학법은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학 비리가 일부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바로 엇그제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학법이 반교육적 사학의 비리를 막지 못한다면 분명 어디엔가 허점이 있는 까닭이다. 문제는 개정의 폭과 방향을 놓고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산을 오르다

길을 잃으면 잠시 머물러 정신을 가다듬는 게 지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철학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학법 개정 논의가 사학의 비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비리근절 그 자체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학의 건전성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사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또 사학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던 시절이었기에 사학 비리도 가능했을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이 시대정신으로 논의되고 요즘에야 사학의 비리 역시 언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사학의 비리만을 근절하려 한다면 사학재단이 몸서리치는 개방형 이사제를 구태여 도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과거 비리를 들춰내 지금의 사학재단에 외부 인사라는 멍에를 씌워야 하겠다는 주장은 생경해 보인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교육을 빙자해 비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사학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사학의 비리 연루자는 영원히 재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비리벌칙 규정을 강화해 미래의 비리를 봉쇄하는 방식이 옳을 것이다.

나아가 반교육적 비리를 저지른 사학은 국가가 자치단체가 수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의 사학 문제는 가난했던 시절, 국가나 자치단체가 교육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독지가에게 떠넘겼던 게 원죄다. 자그마치 전국 중학교의 24%, 고교 45% 그리고 대

학의 79%가 사학이다. 사립학교 의존적인 교육체제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문제가 있거나 육영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립학교를 점차 줄인다면 비리 억제효과와 함께 국가교육 체제도 갖추게 될 것이다.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와 교수회를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문제도 감각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교단의 분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권 기구의 다원화가 불리울 소모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관념적 이상론에 함몰된 나머지 대학에서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다가 혹독한 시련을 치르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사회갈등의 조정능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국가사회의 발전 동력을 소진하는 또 하나의 '바람개비'가 되지 않을 지 솔직히 걱정스럽다.

사학법 개정의 문제는 혁명의 과제가 아니라 개혁의 과제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느 한편에서 위세를 동원해 상대의 주장을 묵살하고 일방의 목소리와 입장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행여 지난날의 허물을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 책임을 물으려 해서는 정말 안 된다. 사회의 발전과정을 새겨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반대하는 그들 혹은 방관하는 그들을 함께 끌고 가는 개혁이 억눌러 짓밟고 나가는 쿠데타나 혁명보다 훨씬 어렵고 그래서 아름답고 값어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싶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실타래는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손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